

사회진보연대 주간 소식지

사회화와 노동

발행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문의 전화 02-778-4001~2 | FAX 02-778-4006 | E-mail pssp@jinbo.net

정기구독 신청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www.pssp.org)에서 신청하시면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635호] **진보는 무엇을 성찰해야 하나?**
 - 소위 ‘내란음모’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 [634호]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전환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진보는 무엇을 성찰해야 하나?

- 소위 '내란음모'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정권과 우파의 '종북' 딱지 붙이기 마녀사냥이 연일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진보=통합 진보당=종북이라는 부당전제를 깔고 있는 이데올로기 공세의 노림수는 분명해 보인다. 종북과 폭력의 이미지로 얼룩진 통합진보당이라는 '약한 고리'를 타격하여 진보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허물어뜨리려는 것이다. 일종의 광기라 칭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상황에서 그나마 '애정 어린' 비판을 찾는다면 진보가 '낮은 소영웅주의적 정신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전향한 청산주의자들의 고해성사 정도일 것이다.

진보의 위기 대응 태도

공안당국의 물리적 탄압에 뒤이은 이러한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서 진보는 궁지에 처한 듯하다. 한편에 '자신은 위기와 무관하다'는 정의당의 기회주의적 태도가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위기의 원인은 외부의 탄압에 있다'는 통합진보당의 자기변호론적 태도가 있을 텐데, 둘 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해나가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전자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면, 후자는 통합진보당의 위기가 진보라는 표상 자체의 위기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맹목적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민주당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논리를 동원하여 '진보정당'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정의당은 논외로 하자. 통합진보당의 태도는 내란음모 '조작'을 둘러싼 장기간의 공방을 통

해 일부 법률적 승리와 내부 결속의 강화라는 성과로 귀결될지는 몰라도, 진보의 정치적 승리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민중운동이 정권의 공안탄압과 우파의 여론공세에 맞서 함께 싸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추락한 진보의 표상을 새롭게 재구성하지 못한다면 대중의 신뢰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때 '나는 통합진보당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손쉬운 방법이지만,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통합진보당이 기층 대중운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관건은 이들과의 분리가 아니라 민중운동의 많은 부분을 점한 민족해방 이념과 노선에 대해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평화주의적 행동수단이었나

이를 위해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복합적 요인들을 역사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반기부터 연달아 발생하는 통합진보당을 포함한 통일운동 진영에 대한 정권의 공안탄압을 동아시아·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정세 속에서 보수세력의 대응이라는 큰 틀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여기서 나타나는 이석기 의원 등의 정세 인식이나 전략전술의 문제점을 복한 사회주의 건설의 곤란과 대남전략의 변화 추이에 조응하는 민족해방 이념·노선의 모순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안당국이 공개한 5월 회합 녹취록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 등은 북미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

치 구도를 ‘불의의 전쟁’과 ‘정의의 전쟁’이라는 구도로 파악하면서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북미 대결 구도에서 북한의 핵무장이 평화협정 체결의 지렛대라는 이들의 정세인식은 역관계에 대한 오판일 뿐더러 핵전쟁의 특성에 대해 맹목적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위험하다. 또 이들은 주요 시설에 대한 타격을 은밀히 수행하는 것을 ‘유사시’ 행동지침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회운동이 채택하는 반전평화의 보편적 행동수단이 될 수 없다.

이는 세간에서 흔히 조롱하듯이 ‘시대착오적’이라거나 또는 단지 ‘폭력적’이어서가 아니다. 평화운동의 역사 또는 사회주의의 전통에서 전쟁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최선의 행동으로 채택되었던 대중적 반전시위나 총파업이 아니라 일종의 군사주의를 모방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이들이 ‘유사시’에 남한의 대중운동에 기초한 전술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역량을 지지·보좌한다는 관념에 기초한 전술을 고려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처럼 현재 한반도 정세를 미 제국주의의 ‘불의의 전쟁’과 북한 사회주의의 ‘정의의 전쟁’이라는 구도로 분석하고 군사주의에 입각한 전술 방침을 수립하는 것은 비단 몇몇 특정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민족해방계열 전반이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전략적 관념이다. 따라서 민족해방 노선의 역사적 모순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민족해방 노선은 진지한 검토 대상인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북한이 평화공존론을 채택한 이래 남한의 민족민주 운동은 ‘사회주의 조국’으로서 북한을 보위하는 역할로 그 지위를 설정한다. 이러한 시도는 통일혁명당, 인혁당재건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의

시도로 이어지고, 이는 1985년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계승된다. 1980년대 북한은 1970년대 이후 평화정착 및 남북합작방식의 통일론을 재확인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서 민주자주정부수립을 주장한다. 이에 조용하여 1980년대 중후반 한국사회성격논쟁을 거치며 ‘식민지반봉건/반자본주의사회론-민주자주정부론-완전연방제론’으로서 민족해방 노선이 정립된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1990년대에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와중에 경제위기와 함께 에너지·식량 위기가 발생하면서 북한경제는 붕괴한다. 경제위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선군정치가 출현하고, 극단화된 스탈린주의로서 수령론을 핵심으로 하는 김일성주의는 부자세습이라는 형태로 재생산된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의 대외전략은 ▲북미수교를 통한 안전보장의 획득 ▲북일수교를 통한 경제적 지원의 획득 ▲남북관계의 안정화(2국가 2체제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나 한미일 삼각동맹의 압박 속에 본격적인 핵무장을 추진한다.

1990년대 이후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북한 사회주의의 고립, 그리고 통일운동의 분열 등 주객관적 정세의 변화 속에서 민족해방 진영은 전략의 동요를 겪으며 조직적으로도 이완된다. 그러던 중 김대중 정부에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체결되자 민족해방 진영은 이를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로 규정하고 민족민주전선 재편을 주장한다. 남한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의 이면에 다르지 않은 ‘햇볕정책’이 추진되고 북한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핵무장’이 추진되는 정세 속에서, 민족해방 진영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한의 점진적 개혁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기존의 민족민주전선론을 다시 정식화한 것이다. 과거 민족해방 진영의 전략이 민족민주전선체에 기초한 민자정-연방제라

는 단계론적 변혁·통일론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 민족민주정당에 기초해서 민자정-(낮은 단계의)연방제로 이행한다는 이들의 조직노선 변화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진로였다. 이후 민족해방 진영은 민주노동당 조직적 입당, 자주민주통일 전국현장조직 건설, 전국민중연대-통일연대 건설로 민족민주전선 재편을 현실화한다.



한반도의 위기, 민중운동의 위기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위기와 대화가 반복되는 교착 국면에서 북한은 협상의 지렛대로서 핵·미사일 역량을 점차 제고한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대응하여 미국은 군사적 압박, 경제적 제재, 외교적 고립을 통해 대북 봉쇄를 강화하였고, 이는 현재 오바마 정부의 '은근한 무시'와 '전략적 인내' 정책기조에 반영되고 있다. 금융위기·경제위기를 배경으로 하는 미국의 '태평양으로의 선회'에 따라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도 점점 호전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하위 파트너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 상반기 한반도에서는 한미동맹 대 북한의 군사적 대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하게 펼쳐졌다. 전략폭격기 B-52, 스텔스폭격기 B-2, 핵잠수함 샤이엔을 동원한 한미동맹의 대북 핵위협 속에서 북한도 '정전협정 백지화,' '핵 선제 타격권 행사,' '남북불가침합의 무효,' '남북 관계 전시상황 돌입' 등으로 맞섰다. 이런 '비상한' 정세에서, 남한의 민족해방 진영은 북한의 핵무장을 대미 협상수단 또는 자위수단으로서 인정하거나 평화협정 체결의 결정적인 지렛대라며 옹호했다. 그러나 인류의 절멸을 예고하는 핵전쟁에서 '불의의 전쟁'과 '정

의의 전쟁'의 구별은 애당초 무의미하다. 대신 평화라는 이상에 따라 사회운동은 '일방적 군비 축소'와 '군사동맹 폐기'와 같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자신의 이념으로 채택해야 마땅하다. 북한의 핵무장이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곤란을 반증한다면, 그에 조응하는 남한 민족해방 진영의 핵무장 옹호는 역설적이게도 남한 사회변혁 전망의 빈곤을 반증한다. 민주노동당의 당권을 장악한 민족해방 진영은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채택한 뒤 국민참여당과 합당하여 통합진보당을 결성했다. 야권연대나 연립정부 참여를 통해 민주자주정부를 수립한다는 민족민주전선론에 따른 결과였다. 정당운동뿐만 아니라 대중조직과 연대체 수준에서 공히 민족민주전선을 강화한다는 이러한 민족해방 진영의 '10년의 전망'은 민주노동당의 분열 외에도 민주노총의 정파적 갈등, 전국민중연대의 해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과정에서 민족해방 진영의 주류로 부상한 '경기동부연합' 또는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모습은 민족해방 노선의 모순이 극적으로 표출된 한 사례일 뿐이다.

사태에 대한 반성

다시 말하지만, 현재의 위기는 비단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으로부터 발생하는 위기가 아니라 진보의 표상, 그러니까 민중운동의 이념과 노선에 대한 대중적 불신으로부터 발생하는 위기다. 따라서 공안탄압에 맞선 공동 행동뿐만 아니라 이념과 노선을 성찰하고 혁신하기 위한 공동 토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족주의가 아니라 평화주의로서 국제주의를 이념으로 채택하는 것, 모종의 전략적 관념을 전제한 민족민주전선론을 정정하고 남한 사회변혁의 새로운 전망을 사고하는 것, 민중운동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한 조직노선을 반성하고 단결과 혁신의 주체로 거듭나는 것이 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위기를 부정하는 것은 위기를 지연하는 것일 뿐, 사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뼈아픈 일이지만 오류를 인정하고 모순을 작동시킬 때 비로소 위기는 해결될 것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전환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지난 9월 5일,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13-20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65,711명이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2011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해고 위험은 여전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에 공공부문이 앞장서겠다”며,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의지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전환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인데,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만 정해져있지 않을 뿐, 임금은 비정규직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노동조건 차별·해고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 아니라 ‘중규직’ 또는 ‘이름만 다른 비정규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번 발표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34,000여 명에 대해 일한 기간이 2년이 아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얼핏 보면 기간제법이 정한 2년보다 빨리 고용을 보장받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교과부가 조사한 2013년 학교비정규직 계약해

지 실태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1,118명이 해고됐다. 전체 계약해지자 6,457명 중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또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계약해지 사례도 있다. 무기계약 전환이 결코 고용의 안전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무기계약직이 차별해소는 이루지 못하지만 고용안정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봤던 일부의 시각과는 다르게 고용마저도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이다.

편법은 눈감고 기관 권한만 키우는 정부 지침

또한 이번 계획에는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다. 공공기관은 일정 기간이 지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 지침을 지키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다. 직접고용이 아니라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용역업체가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여러 복잡한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정부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인천국제공항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정규직 857명에 간접고용은 5,960여 명으로 전체의 87%가 간접고용이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2006년 64,822명에서 2012년 110,641명으로 오히려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현실에 눈감고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은 이전 정부 때부터 문

제가 많았다. 이명박 정부 시기였던 2012년 1월 발표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는 전환대상자 선정 시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를 평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 해당 기관이 자체 평가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전환 제외” 할 수 있다. 현행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넘게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기간제법에 의해 정규직 전환 요건이 되더라도 기관의 판단에 따라 제외할 수 있는 것이다.

하반기, 한 판 싸움이 다가온다

올해 4월, 10만 여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과 호봉제 도입 등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를 구성했다. 이들은 이번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발표를 비판하며 “공공부문에 만연한 외주화 확산을 금지·규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조사와 정규직화 방안을 제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각종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올 하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9월 28일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대회에 이어 10월에는 인천 공항지역지부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생색내기, 허점투성이의 비정규직 대책은 우리의 대안일 수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자.

